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류 연 규**

초 록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정책,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범주화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목표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형평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여성 고용 증가와 임금의 젠더 형평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가족양립정책 각 범주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가족양립정책이 발전한 OECD 16개국 21개년 자료를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서비스지출비율은 여성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여성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인 가족서비스지출, 육아휴직 등은 여성노동시장의 젠더형평성 즉 여성 고용과 남녀임금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 확대-보육서비스 지출 증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보육서비스 지출을 보다 증가시키고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일가족양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주제어: 일가족양립정책, 젠더형평성, 여성고용, 남녀임금비율,
결합시계열분석

*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yqryu@stu.ac.kr)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16개국 21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OECD의 일가족양립정책 정의에 따르면 일가족양립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OECD, 2002; 홍승아 외, 2008:24에서 재인용). 즉 사회성원으로서 노동 시장과 가족 영역에서 시장 노동과 돌봄 노동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정책 대상은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는 크게 현금급여 및 조세제도, 휴가정책, 보육서비스, 가족 친화적 근로시간 등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OECD, 2007; 홍승아 외, 2008). 복지국가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정책 구성과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OECD(2007:12-13)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목표를 아동이 있는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족 영역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내며, 양육과 고용의 장애 요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 실행하는 이러한 정책들의 구체적인 성과 또는 정책 목표를 여성 고용, 아동 발달, 젠더 형평성, 출산율 등으로 제시한다.

이 중 여성 고용 증가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목표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여러 OECD 국가에서 여성 고용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증가는 경제 성장, 연금 급여, 사회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EU에서도 여성 고용 증가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며, 2010년까지 여성 고용률 6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OECD, 2007: 14).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모두의 고용 증가를 위한 정책이지만, 출산·양육·부양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일가족양립 지원의 결과 여성 고용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 고용 증가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동발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육서비스

나 일하는 부모에 대한 (조세)급여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고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할 때 여성 고용은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젠더 형평성은 일가족양립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일가족양립이 어려워 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직종의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여성과 돌봄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고용 지원을 넘어 남성의 돌봄 부담 공유를 통한 젠더 형평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젠더 형평성은 노동시장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가족 영역에서의 젠더형평성은 최근 발달하기 시작한 생활시간조사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데, 김은지(2008)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정책, 휴가정책 등의 일가족양립정책은 무급노동시간에서의 성별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형평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여성고용에 대한 정책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Gustafsson & Stafford, 1992; Gustafsson, 1995; Meyers et al. 1999; Ruhm, 1998; Jaumatt, 2003; 김영미, 2007) 노동시장의 젠더 형평성은 사실상 고용 형평성뿐만 아니라 임금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 고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저임금직종이나 비정규직에 머무른다면 가족 영역에서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형평성은 여성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상대적 임금격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젠더 형평성을 다루면서 여성고용과 여성의 상대적 임금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여성 고용과 상대적 임금에 대한 분석이 각각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가족양립정책의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정책 등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함께 분석했다 하더라도 각 정책을 지수화하여 전반적인 일가족양립정책 수준과 여성고용, 임금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뿐 각 정책범주의 개별적 영향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정책 등 일가족양립정책이 노동시장의 젠더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 부문과 임금 부문 모두에 대해 실증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고용률 및 남녀임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정책 등 일가족양립정책¹⁾이 여성 고용(여성고용률)과 여성의 상대적 임금(남녀임금비율)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젠더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여성고용률, 남녀임금비율)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여성고용률, 남녀임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은 본 연구 내용이나 분석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가족양립정책은 취업 부모의 가족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들로서 크게 보육정책,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시간 정책, 조세정책, 보육비 지원 등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먼저 검토하고, 두 번째로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한다.

1)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은 본 연구에서 정책의 고유한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함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년간 여러 국가에 대하여 축적된 정책 자료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다.

1)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 고용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다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정책, 아동수당, 가족에 대한 조세혜택 등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가 간 비교연구로는 Meyers et al.(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제지원, 공공보육시설 접근성과 이용률 등으로 지수화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연속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일가족양립정책의 여성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Jaumatt(2003)은 1985~1999년 17개국을 대상으로 25~54세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포함된 일가족양립정책은 조세정책(2차소득자에 대한 상대소득세율),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파트타임비율(근로시간유연제도의 대리변수)이었는데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이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풀타임 고용률과 파트타임 고용률에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추가로 분석했는데 풀타임 고용률에는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Ruhm(1998)은 1969~1993년 9개 국가의 유급육아휴직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유급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Neyer(2003)의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례분석을 통해 육아휴직기간이 2년 정도가 되면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고(김영미, 2007:48에서 재인용), Edin & Gustavsson(2001)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연장이 노동시장 경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umatt, 2003에서 재인용). Pettit & Hook(2002)의 연구에서도 모성휴가기간이 여성고용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정책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들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Gustafsson & Stafford(1992)는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양질의 보육시설이 미취학 연령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이러한 양질의 보육시설을 사용 가능하다면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다. 또한 양질의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더라도 보육비용이 낮으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Gustafsson(1995)의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개별과세/합산과세와 보육비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개별과세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 독일의 합산과세 형태의 세제를 운영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실증 분석을 통해 조세제도 개별과세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의 가격 탄력성 분석을 통해 보육비지원이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Gelbach(2002)와 Chevalier & Viitanen(2002) 역시 보육정책과 여성 고용의 강한 정적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Jaumatt, 2003에서 재인용). 김영미(2007)의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 내용만이 아닌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영향을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면서 출산휴가기간, 가족조세비율이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실증 분석에서는 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휴가제도와 조세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육정책과 육아휴직, 보육비세제지원을 함께 분석한 Meyers et al.(1999)의 연구는 모든 정책 내용을 합산한 지수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 영향을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여성 고용을 증가시켰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가족양립정책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지원 등의 제도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1〉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	일가족양립정책 내용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
Meyers et al. (1999)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 보육비세제지원, 공공보육시설 접근성과 이용률 등 지수화	지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 증가
Jaumatt(2003)	조세정책(2차소득자에 대한 상대소득세율),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파트타임비율(근로시간유연제도의 대리변수)	보육비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 높을수록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Ruhm(1998)	유급육아휴직정책	유급육아휴직기간이 여성 고용 가능성을 증가
Neyer(200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 2년 이상이면 노동시장 복귀에 부정적
Edin & Gustavsson(200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길수록 여성 고용에 부정적
Gustafsson & Stafford(1992)	아동보육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양질의 보육시설 여성 고용에 긍정적
Gustafsson(1995)	조세제도, 보육비 지원	개별과세, 보육비 지원 여성 고용에 긍정적
Gelbach(2002)	보육정책	보육정책 발달이 여성 고용에 긍정적
Chevalier & Viitanen(2002)	보육정책	보육정책 발달이 여성 고용에 긍정적
김영미(2007)	과세단위, 가족조세비율, 출산휴가기간, 급여수준, 육아휴직기간	가족조세비율, 출산휴가기간 긍정적

일가족양립정책 외에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으로 다양하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당 GDP, 여성임금, 실업률 등의 요인을 들 수 있고, 정치적 요인으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톨릭 신자 비율이 많이 언급된다.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여성 고용수준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경기 호(불)황의 지수가 되는데, 경기 불황

이 지속되면 여성 고용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여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미(2007:35)는 실업률의 ‘실망노동자효과’와 ‘부가노동자효과’ 중 실망노동자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을 인용하면서 경기가 호황이어서 실업률이 감소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경기가 불황이어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감소한다고 언급하였다. 정치적으로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젠더 평등과 여성 노동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김영미, 2007). 김영미(2007)는 높은 수준의 여성 대표성이 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성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²⁾,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로 측정된 여성 대표성이 여성 노동시장 참가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적 요인으로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을수록 가족(여성)의 돌봄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³⁾이 증가할수록 아동 양육에 대한 노동시장 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을 통해 여성을 가족 돌봄 영역으로 유인하려는 동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고용에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

여성 고용과 출산율 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젠더 형평성이다. 이러한 젠더 형평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생활시간조사와 관련된 연구가 많아지면서 실제 시간 사용의 젠더간 격차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아졌지만, 국가간 시계열 비교를 위한 충분한 자료

2) 높은 수준의 여성 대표성은 출산휴가, 보육정책, 동등고용 및 임금정책 등 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효과’(policy effect)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정부, 노동조합과의 협력 하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마련하였고 파트타임 일자리의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전개하는데 참여해 왔다(Sainsbury, 1999; 김영미, 2007:39에서 재인용).

3)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다루는 현금급여지출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 급여로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정책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같은 현금급여는 구분된다.

가 구축되지 않았다. 실제 시간 사용의 차이 외에 젠더 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지표는 임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지위 차이를 나타내는 젠더간 임금 차이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 고용이나 출산율과 일가족양립정책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만 일가족양립정책과 젠더간 임금격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Mandel & Semyonov(2003)의 연구에서 유급 모성휴가기간, 공공보육시설 등록률, 복지지출비율로 구성된 복지정책 지수와 젠더 임금격차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젠더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밝혔다. Gupta & Smith(2002)의 연구에서도 유급육아휴직을 경험한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의 임금을 곧바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Jaumotte, 2003에서 재인용).

Ruhm(1998)의 연구에서는 육아휴직급여기간이 여성 고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임금은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Edin & Gustavsson(2001)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여성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Jaumotte, 2003에서 재인용), Mandel & Semyonov(2005)에서는 가족정책의 여성 노동자 보호가 오히려 젠더간 직종분리와 고용주의 통계적 차별을 통해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일가족양립정책과 젠더간 임금격차의 관계도 그 방향을 명확히 실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젠더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영향이 모호한 데다 휴가정책과 보육서비스 정책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각각의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분석한 연구가 없어 일가족양립정책의 범주별 남녀임금격차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	일가족양립정책 내용	남녀임금비율에 미치는 효과
Mandel & Semyonov(2003)	유급 모성휴가기간, 공공보육시설 등록률, 복지지출비율	정책 지수값이 높을수록 젠더 임금 격차 감소
Ruhm(1998)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길수록 임금격차 확대
Edin & Gustavsson(200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길수록 임금격차 확대

일가족양립정책 외에 젠더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제해야 할 변수들에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여성고용률, 여성국회의원비율, 가톨릭 신자비율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복지국가 복지정책 모델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을 전제로 남성 노동자 임금을 가족임금의 형태로 높게 지급하고 가족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피부양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이 높을수록 남녀임금비율이 낮을 수 있다. 여성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감소할 것이고, 여성국회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젠더간 임금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며⁴⁾, 가톨릭신자비율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를 선호하므로 젠더간 임금격차가 높을 수 있다.

3.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1) 분석방법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고용률, 출산율, 남녀임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결합시계열분석을 사용한다. 결합시계열분석은 횡단

4) Huber et al.(2004)의 연구에서 ‘전체국회의원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부부 전체 임금 중 여성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 동안 25개 국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여성임금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07:39에서 재인용).

자료와 종단(시계열)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분석단위간, 시점간 변화를 모두 포착할 수 있다(Sayrs, 1989). 또한 횡단분석이나 시계열분석 어느 한 방법만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례수의 문제(small-N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다. 사례수가 부족할 경우 독립변수의 수가 자유도의 허용 한도를 넘게 되어 자료의 다각적인 분석이 불가능한데, 결합시계열분석은 사례수가 (횡단사례수)×(시계열사례수)로 증가하여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도 분석이 가능하다(Federico, 2002). 특히 국가 간 제도 비교 연구에서는 국가 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 시행의 역사가 짧아 횡단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어느 한 방법만을 사용할 경우 사례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본 연구와 같은 국가 간 제도 효과 분석에서는 결합시계열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결합시계열분석은 횡단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변수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다(Federico, 2002). 국가 제도나 정책들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량만으로 제도나 정책을 분석하기에는 변량이 너무 작아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횡단분석과 결합함으로써 변량이 커져 제도 효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노동시장 젠더형평성효과-여성고용률, 남성임금대비여성임금비율-와 일가족양립정책은 한 국가내의 시간에 따른 변량이 매우 작은 변수이기 때문에 결합시계열분석은 제도의 일가족양립효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시계열분석을 위해서 STAT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femp_{i,t} = \alpha + \lambda femp_{i,t-5} + \sum_{j=1}^j \beta_j X_{j,i,t} + \sum_{k=1}^k \delta_k Z_{k,i,t} + \mu_{i-1} + e_{i,t} \quad (e_{i,t} = \rho e_{i,t-1} + v_{i,t})$$

(여성고용률)

(fempi,t : 종속변수(여성고용률) α: 상수항 fempi,t-5: 시차종속변수⁵⁾ X_{j,i,t}: 독립변수(개별 프로그램 또는 지출) Z_{k,i,t}: 통제변수 μ_{i-1}: 국가터미 e_{i,t}: 오차항 v_{i,t}: 무작위오차)

5) 본 연구에서는 시차종속변수로 1년차 종속변수 대신 5년차 종속변수를 투입한다. Huber & Stephens(2001)는 1년 간격의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할 경우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거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김영미, 2007:118에서 재인용), 5년 간격의 시차종속변수 투입을 제안한 바 있다.

$$\text{wratio}_{i,t} = \alpha + \lambda \text{wratio}_{i,t-5} + \sum_{j=1}^j \beta_j X_{j,i,t} + \sum_{k=1}^k \delta_k Z_{k,i,t} + \mu_{i-1} + e_{i,t} \quad (e_{i,t} = \rho e_{i,t-1} + v_{i,t})$$

(남녀임금비율)

(wratio_{i,t} : 종속변수(남녀임금비율) α: 상수항 wratio_{i,t-5}: 시차종속변수 X_{j,i,t}: 독립변수(개별 프로그램 또는 지출) Z_{k,i,t}: 통제변수 μ_{i-1}: 국가더미 e_{i,t} : 오차항 v_{i,t}: 무작위오차)

위에서 열거한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형평성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을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을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다룰 수 있고 국가 간 비교 가능하도록 집합적 수치(aggregated data)로 나타낸 데이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 효과의 실증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정책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분석 단위가 국가인 경우 분석 대상 국가수가 너무 적어서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일부 일가족양립정책들(예를 들면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은 자료수집 가능한 시점이 한정되어 있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가족양립을 위한 조세감면이나 현금지원은 국가 내에서도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 제도를 대표하는 지원액(급여액)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2000년 OECD 국가 16개국의 일가족양립정책(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양성평등한 조세정책)과 여성고용률, 남녀임금비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분석자료

(1) 일가족양립정책 변수 설명과 한계

본 연구의 일가족양립정책 노동시장 젠더형평성 효과 분석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을 보육정책, 부모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조세정책으로 한정하였다. 국가부문의 보육정책의 발달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계열 자료로 확보 가능한 지표는 거의 없다. 공공부문 보육시설 등록률도 OECD 국가 대상의 자료로 2~3개년도 자료에 불과하고, OECD에서 보육서비스 지출만 따로 계산

하기 시작한 지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축적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 비율을 사용하여 보육서비스 지출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에는 보육서비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지출을 명확히 포착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축적되어 있는 시계열 자료 중 가장 근접한 지표라고 파악된다. 실제로 OECD의 SOCX 자료 중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의 세부항목 구분이 가능한 국가 자료를 확인하면,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의 항목은 대부분 보육서비스 지출로 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기타 서비스(가사서비스,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자료로는 Guathier가 수집한 FPDB(Family Policy Database)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 급여 소득대체율이 나와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결측치가 너무 많아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가족조세비율은 개별과세/합산과세 여부와 함께 조세정책의 여성 노동 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부과하는 세율과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율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수치가 높으면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에 비하여 기타가구의 조세 penalty가 적은 것으로 조세정책에서의 양성평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2005)의 <Taxing Wages>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조세비율 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자료 설명

① OECD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는 OECD 30개국의 1980~2003년 프로그램별 사회지출을 수록하고 있다. SOCX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한 사회정책분야는 노령, 유족, 장애, 건강,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분야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OECD의 사회지출 데이터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수록한 DB로서 여러 비교 연구에서 사용하

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가족정책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가족서비스지출, 출산·육아휴직급여지출, 아동가족급여지출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서비스지출을 일가족양립정책 변수로 사용하고, 아동가족급여지출은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② Gauthier(2003)의 가족정책데이터베이스(FPDB: Family Policy Database)

일가족양립정책 내용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출산율의 관계 분석을 위해 Gauthier(2003)가 구성한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version 2)⁶⁾를 사용한다. Gauthier가 구성한 DB는 OECD 22개국의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가족급여와 인구학적·경제적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에 대해 결측치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를 재구성하였다. SOCX의 데이터는 일가족양립정책 관련 지출액을 나타내는 반면 FPDB는 각국의 정책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족정책 관련 비교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을 일가족양립정책 변수로 사용하고, 남녀임금비율을 젠더형평성의 대리변수로서 데이터베이스 원자료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③ Huber et al.(1997; 2004)

비교 복지국가데이터베이스는 Huber et al.이 1997년 구축해 놓은 복지국가 비교분석을 위한 DB로 2004년 David Brady 등에 의해 업데이트되었다. 이 DB는 18개 국가의 1960~2003년 자료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각국의 임금, 사회복지지출, 노동시장 및 제도 관련 변수, 인구 변수, 거시경제변수, 정치적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외의 인구·사회·정치적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정치학,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국회의원비율, 1인당 GDP, 가톨릭신자비율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6) 인터넷 출처: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이상의 자료 외에 여성고용률, 가족조세비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OECD Factbook(2008), OECD(2005)의 Taxing Wages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자료 출처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 관계 분석 변수

구분	분석변수	변수설명	자료 출처
종속변수	여성고용률	15세이상 여성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	OECD Factbook 2008
설명 변수	일가족 양립정책	가족서비스지출	OECD SOCX(2007)
		출산휴가기간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출산휴가급여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육아휴직기간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가족조세비용	OECD(2005), Taxing Wages/ The tax/benefit position of employees
통제 변수	정책, 경제, 정치, 문화적 조건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OECD SOCX(2007)
		1인당 GDP	Huber et al.(2004)
		GDP대비여성임금	Huber et al.(2004)과 Gauthier(2001)을 이용해 계산
		실업률(stunemr)	Huber et al.(2004)
		여성국회의원비율	Huber et al.(2004)
		가톨릭신자비율	Huber et al.(2004)
	시차 종속 변수	여성고용률(t-5)	OECD Factbook 2008

〈표 4〉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 관계 분석 변수

구분	분석변수	변수설명	자료 출처
설 명 변 수	종속변수	남녀임금비율	여성임금/남성임금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일가족 양립정책	가족서비스지출	GDP대비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출 비율 OECD SOCX(2007)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주)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출산휴가급여	여성 생산직 근로자 임금 대비 출산휴가급여 비율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주)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가족조세비율	(남성생계부양자+자녀2명 가구 소득세)/독신가구소득세 OECD(2005), Taxing Wages/ The tax/benefit position of employees
통 제 변 수	정책, 경제, 정치, 문화적 조건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 지출	GDP대비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비율 OECD SOCX(2007)
		여성고용률(femp) ⁷⁾	15세이상 여성 인구 중 취업자 수 비율 ILO Statistics (http://laborsta.ilo.org/)
		실업률(stunemr)	표준화된 실업률 Huber et al.(2004)
		여성국회의원비율	전체 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 Huber et al.(2004)
		가톨릭신자비율	전체 인구 중 가톨릭 신자 비율 Huber et al.(2004)
	시차 종속 변수	남녀임금비율(t-5)	5년 전 남녀임금비율 Gauthier(2001) 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3) 분석대상 기간과 국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과 국가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는 197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사회복지지출 관련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1980년부터이기 때문에 분석 기간은 1980년부터로 한정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정책 관련 변수가 2000년까지만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석기간은 2000년까지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국가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로 한정하되, 결합시계열 분석의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6개 국가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5〉 분석대상 국가와 연도

분석기간 (21개년도)	분석대상국가(16개국)	
1980~ 2000년	자유주의 국가군(1)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보수주의 국가군(2)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사민주의 국가군(3)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가족주의 국가군(4)	이탈리아,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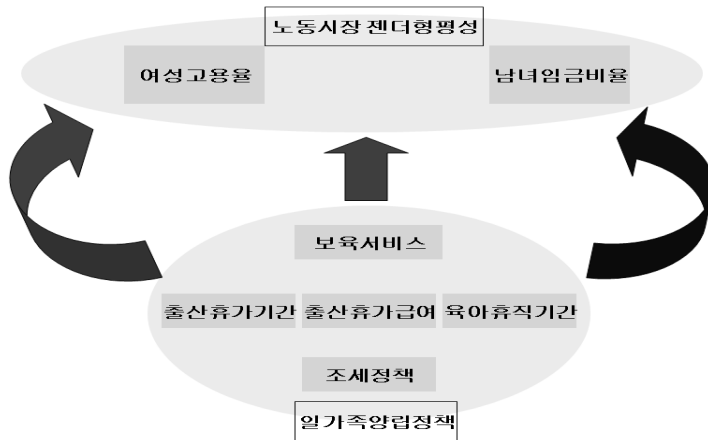
3) 분석틀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를 여성고용률, 남녀임금비율과 정책의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가족양립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2가지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 형평

7) 본 연구 분석에서는 여성 고용과 임금비율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과 여성고용률은 순환적 인과관계가 있지만, 여성고용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젠더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위험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 효과로 대표되는 여성고용률, 남녀임금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보육서비스지출,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조세정책 등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그림 1] 일가족양립정책이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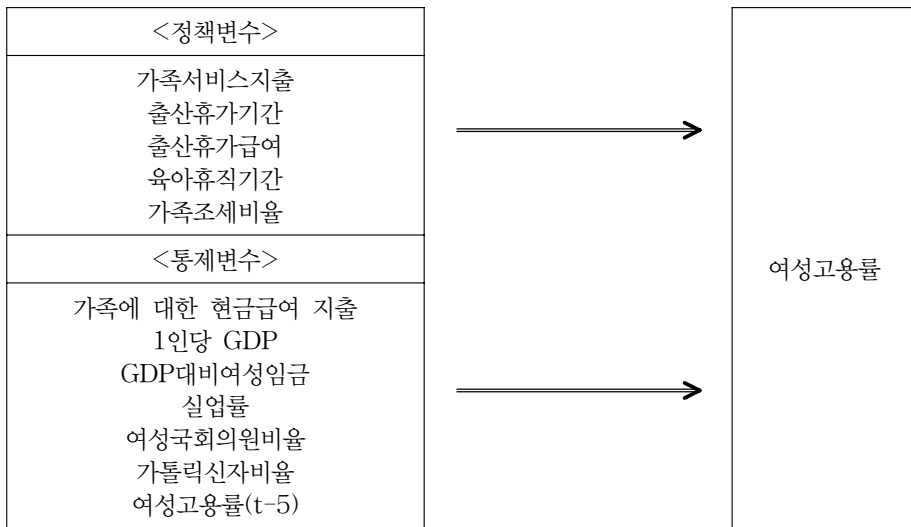


위의 전체적인 분석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변수 설명은 분석변수 설명에서 제시).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가족양립정책변수에 해당하는 가족서비스지출,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가족조세비율 변수와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인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 1인당 GDP, GDP 대비 여성임금, 실업률, 여성국회의원비율, 가톨릭신자비율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에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하였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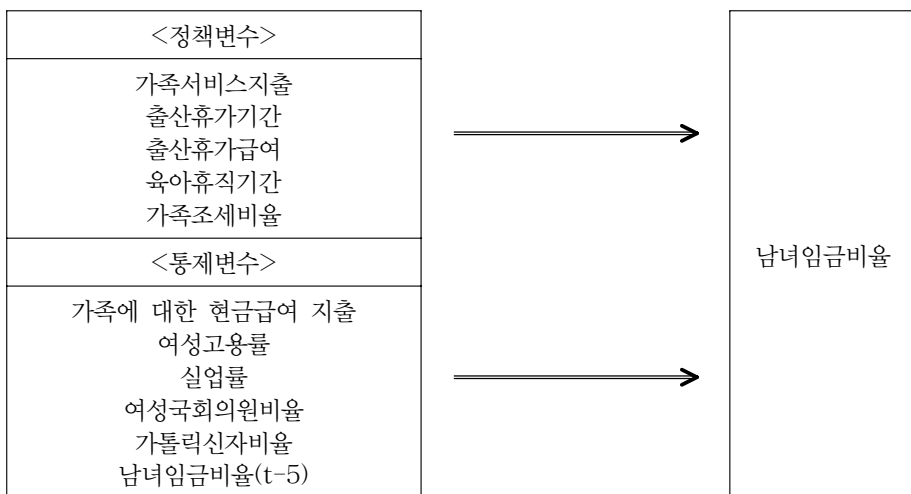
한편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일가족양립정책변수에 해당하는 가족서비스지출,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기간, 가족조세비율 변수와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인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 여성고용률, 실업률, 여성국회의원비율, 가톨릭신자비율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마

참가지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2〕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 분석틀



〔그림 3〕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의 관계 분석틀



4. 분석결과

1) 국가군별 일가족양립정책 변화

각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군별로 5년 간격(1980~1984년, 1985~1989년, 1990~1994년, 1995~2000년) 변화를 살펴보았다. 국가군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가족주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 국가군에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이 포함되고 보수주의 국가군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가 포함되며, 사민주의 국가군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포함된다. 가족주의 국가군에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포함된다.⁸⁾

(1)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기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지는 경향이다. 1980~84년 평균 16.8주였던 출산휴가기간은 1995~2000년 기간이 되면 21.7주로 길어진다. 각 국가군별로 살펴보면, 자유주의 국가군의 평균 출산휴가기간이 8.25주로 가장 짧고(영국, 캐나다만이 국가가 보장하는 출산휴가를 갖고 있다), 사민주의 국가군은 1980년대 초반부터 평균 29.7주로 꽤 긴 기간 출산휴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평균 49.8주로 길어진다. 보수주의 국가군과 가족주

8) 본 연구는 복지국가 체제별 정책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양립정책의 특성에 따른 일가족양립효과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유형화 혹은 체제 구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제도 내용과 일가족양립효과의 단순 비교 분석 시에는 설명의 편의상 분석대상 국가를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 이 4개의 지역별 국가군 분류는 복지국가 유형화연구에서 많이 제안하는 분류로, Esping-Andersen(1990)의 3개 국가군 유형화에서 보수주의 체제를 중부유럽과 남유럽으로 나누어 4개 국가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에 의하면 영미권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universal breadwinner policy),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여성 노동 지원적으로 발달해 있고(earner-carer policy),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부유럽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모성 지원적으로 발달해 있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낮게 나타나며(caregiver parity policy), 남유럽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발달하지 않고, 여성경제활동참여율도 낮다(Neyer, 2003; 김수정, 2002; Fraser, 1997). 한편 프랑스와 벨기에는 가족정책의 성격상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비슷하지만(Anttonen & Sipilä, 1996; Gornick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중부유럽 국가에 포함시켜 분류하기로 한다. 일본은 가족주의 국가군으로 분류하였다.

의 국가군의 출산휴가기간은 각각 1990년대 후반 기준 15~17.8주로 길지 않다.

〈표 6〉 출산휴가기간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단위: 주)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8.25	8.25	8.25	8.25	8.25
	표준편차	8.53	8.53	8.53	8.49	8.36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13.66	13.66	14.10	15.16	14.19
	표준편차	2.17	2.17	2.23	1.48	2.09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29.66	34.7	44.00	49.75	39.15
	표준편차	11.36	14.14	15.43	13.17	15.06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17.63	16.95	17.75	17.75	17.53
	표준편차	5.97	4.83	3.95	3.91	4.53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16.80	17.98	20.56	21.65	19.36
	표준편차	10.88	13.11	16.51	16.86	14.74

(2)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의 전체 평균은 생산직 여성 노동자 임금 대비 64.8%에서 65.6%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들의 평균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은 1980년대 초반 81.7%에서 1990년대 초반 91%까지 증가했으나 1990년대 후반 84.6%로 낮아졌다. 자유주의 국가군 국가들은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보장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수주의 국가군

국가들의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도 약 78%로 높은 편이다.

〈표 7〉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단위: %)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25.20	23.30	26.30	24.83	24.90
	표준편차	26.89	26.04	27.47	26.65	26.02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78.25	77.94	76.97	78.61	77.97
	표준편차	36.39	36.39	36.17	36.72	36.00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81.70	85.25	91.00	84.62	85.59
	표준편차	36.39	36.39	36.17	36.72	36.00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70.00	70.00	70.00	70.00	70.00
	표준편차	10.54	10.54	10.54	10.44	10.12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64.81	65.11	66.94	65.59	65.61
	표준편차	36.18	36.09	36.07	36.22	35.99

(3)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다른 일가족양립정책 지표들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지표이다. 1980년대 초반 전체 국가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19.5주에 그쳤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66.6주로 증가하였다. 대부분 국가들의 육아휴직기간이 1980년대 초반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수주의 국가군 국가들과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들의 육아휴직기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8〉 육아휴직기간 소득대체율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단위: 주)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	0	8.90	21.75	8.33
	표준편차	0	0	15.57	20.55	16.06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26.00	16.63	81.46	86.66	61.45
	표준편차	40.39	48.09	55.35	58.30	56.66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32.50	71.50	79.30	91.00	69.64
	표준편차	34.65	57.75	50.24	44.70	51.55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13.00	13.00	28.60	47.50	26.57
	표준편차	16.70	13.70	19.18	15.24	21.08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19.50	36.98	56.17	66.62	45.86
	표준편차	32.70	49.28	53.59	52.17	51.07

(4) 가족서비스지출 비율

GDP 대비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은 보육서비스 지출의 대리 변수이다. GDP 대비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은 전체 국가 평균 1980년대 초반 0.38%에서 0.64%로 증가했다.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들이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GDP 대비 1.08%의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 당시 다른 국가군 국가들의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은 자유주의 국가군 0.01%, 보수주의 국가군 0.23%, 가족주의 국가군 0.17%에 불과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은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들이 GDP대비 1.51%까지 증가했으며 자유주의 국가군은 0.18%, 보수주의 국가군은 0.49%, 가족주의 국가군은 0.26%로 증가하였다.

〈표 9〉 가족서비스 지출 비율 소득대체율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01	0.14	0.31	0.18	0.06
	표준편차	0.01	0.02	0.05	0.17	0.12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0.23	0.22	0.33	0.49	0.33
	표준편차	0.16	0.14	0.19	0.29	0.23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1.08	1.21	1.47	1.51	1.32
	표준편차	0.56	0.51	0.51	0.42	0.52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0.17	0.15	0.13	0.26	0.18
	표준편차	0.06	0.05	0.06	0.17	0.11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0.38	0.41	0.51	0.64	0.49
	표준편차	0.51	0.54	0.63	0.59	0.58

(5) 가족조세비율

가족조세비율은 독신가구에 부과된 소득세 대비 ‘남성 생계부양자+자녀2명 가구’에 부과된 소득세의 비율로, 수치가 클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여성의 근로소득에 대한 penalty가 적어 여성 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일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주의, 가족주의 국가군 국가일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별로 분석해 보면 자유주의 국가군 국가들과 사민주의 국가군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반면 보수주의 국가군 국가들과 가족주의

국가군 국가들의 경우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혜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조세비율 소득대체율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68	0.70	0.69	0.73	0.70
	표준편차	0.12	0.11	0.12	0.24	0.16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0.57	0.52	0.48	0.47	0.51
	표준편차	0.25	0.25	0.22	0.22	0.23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82	0.82	0.84	0.89	0.84
	표준편차	0.09	0.10	0.10	0.10	0.10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0.55	0.56	0.54	0.53	0.54
	표준편차	0.23	0.28	0.25	0.27	0.25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0.66	0.64	0.63	0.65	0.64
	표준편차	0.21	0.23	0.23	0.27	0.23

2)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

(1) 여성고용률의 국가군별/연도별 변화

여성고용률의 전체 평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53%에서 6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군은 사민주의 국가군으로 이미 1980년대 초반에 67%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고용률 증가폭이 큰 국가군은 자유주의 국가군으로 1980년대 초반 52%였던 고용률이 1990년대 후반에 와

서는 63%까지 증가하였다. 가족주의 국가군은 가장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고, 1990년대 후반에도 47%에 불과했다.

〈표 11〉 여성고용률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단위: %)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52.45	58.13	60.97	63.47	58.98
	표준편차	3.33	3.98	3.01	2.90	5.27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48.66	50.20	54.05	56.98	52.69
	표준편차	11.06	9.95	7.27	6.56	9.32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66.74	71.81	69.16	68.37	68.99
	표준편차	5.23	4.47	5.47	4.60	5.18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42.91	44.00	46.28	47.03	45.15
	표준편차	9.79	10.14	10.75	10.36	10.03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53.41	56.81	58.59	60.21	57.39
	표준편차	11.52	12.30	9.93	8.99	10.94

(2)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 분석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 분석을 위해 시계열자료의 선형회귀 가정을 위배하는지 모델 적합성을 진단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잔차들의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국가/연도별 더미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Breusch-Pagan LM test를 통해 국가 간 동시상관이 있고 Modified

Wald test를 통해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시상관과 이분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Beck & Katz(1995)가 제안한 PCSE 모델(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을 사용하였다. 오차의 자기상관은 5년차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하여 해결하였다.⁹⁾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국가/연도 더미변수 계수들은 생략하였다).

〈표 12〉 일가족양립정책과 여성고용률의 관계 결합시계열 분석

	계수	표준오차	Z	P> Z
5년 전 여성고용률	0.34116	0.065	5.17	0.000
가족서비스 지출	1.46373**	0.724	2.02	0.043
출산휴가 기간	-0.00751	0.037	-0.20	0.840
출산휴가 급여	-0.00342	0.021	-0.16	0.875
육아휴직 기간	0.01552**	0.005	3.02	0.003
가족조세 비율	-0.07746	0.707	-0.11	0.913
현금급여 지출	-1.82949**	0.600	-3.04	0.002
1인당 GDP	0.00005*	0.000	1.87	0.062
GDP 대비 여성임금	-0.69904	1.272	-0.55	0.583
실업률	-0.82455***	0.071	-11.59	0.000
여성국회의원비율	0.10155***	0.031	3.23	0.001
가톨릭신자비율	0.16939	0.160	1.06	0.291
R-Square	0.989			

* p<.10 ** p<.05 *** p<.01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가족양립정책 중 가족서비스지출비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여성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

9) 결합시계열 분석 잔차 진단 통계치

검증 내용	검증통계도구	$\chi^2(p>\chi^2)$	검증 결과	처치방법
고정효과	Hausman	23.15(0.0102)	고정효과 있음	국가더미투입
동시상관	Breusch-Pagan LM	678.684(0.0000)	동시상관 있음	PCSE 모델 적용
이분산성	Modified Wald	2383.28(0.0000)	이분산성 있음	
자기회귀	Durbin-Watson D	0.0872	정적자기상관 있음	5년시차종속변수 투입

다. 보육서비스 등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여성 고용 수준이 증가한다. 이는 Jaumatt(2003), Ruhm(1998)의 연구 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지출, 유급육아휴직기간은 여성의 고용 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의 확대는 여성 고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 1인당 GDP, 실업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이었다. 즉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1인당 GDP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이 증가하고,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력이 증대될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 여성 고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여성고용수준이 감소하는 것은 실업과 여성 고용의 관계에서 김영미(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실망노동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정리하면, 일가족양립정책 중 보육서비스, 육아휴직기간의 여성고용 효과 즉 일가족양립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는 여성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가족양립정책과 남녀임금비율

(1) 남녀임금비율의 레짐별/연도별 효과

남녀임금비율은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녀임금비율이 클수록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녀임금비율이 클수록 여성과 남성의 고용지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녀임금비율의 변량은 크지 않다. 분석 대상 국가들 모두 남녀임금비율은 1990년대 후반에는 75%~85%의 분포를

나타낸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모든 국가들의 남녀임금비율은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주의 국가군과 자유주의 국가군의 남녀임금비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13〉 남녀임금비율 국가군별/5년 간격 기술통계

구분		기간				합계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2000	
자유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66	0.69	0.73	0.76	0.71
	표준편차	0.08	0.08	0.08	0.08	0.09
보수주의	N	30	30	30	36	126
	평균	0.71	0.73	0.73	0.75	0.73
	표준편차	0.04	0.07	0.03	0.04	0.04
사민주의	N	20	20	20	24	84
	평균	0.83	0.83	0.84	0.85	0.84
	표준편차	0.05	0.04	0.04	0.04	0.04
가족주의	N	10	10	10	12	42
	평균	0.65	0.65	0.67	0.74	0.68
	표준편차	0.19	0.18	0.16	0.09	0.16
합계	N	80	80	80	96	336
	평균	0.72	0.73	0.75	0.77	0.75
	표준편차	0.10	0.11	0.09	0.07	0.09

(2) 남녀임금비율과 일가족양립정책의 관계

일가족양립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에서도 시계열자료의 선형회귀가정을 위배하는지 모델 적합성을 진단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잔차들의 고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random-effec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Pesaran test를 통해 국가 간 동시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Modified Wald test를 통해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분산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Beck & Katz(1995)가 제안한 PCSE 모델(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을 사용하되, 오차상관관계 분석에서 잔차간 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¹⁰⁾ 오차의 자기상관은 5년차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하여 해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남녀임금비율과 일가족양립정책의 관계 결합시계열 분석

	계수	표준오차	Z	P> Z
5년 전 남녀임금비율	0.43072	0.135	3.17	0.002
가족서비스 지출	0.03069*	0.018	1.68	0.093
출산휴가 기간	-0.00034	0.000	-0.91	0.365
출산휴가 급여	-0.0037**	0.000	-2.52	0.012
육아휴직 기간	0.00017**	0.000	3.45	0.001
가족조세 비율	0.02295	0.015	1.45	0.146
현금급여 지출	0.00886	0.011	0.77	0.442
실업률	0.00093	0.001	0.64	0.524
여성 고용률	-0.00104	0.001	-0.96	0.333
여성국회의원비율	0.00156**	0.000	2.08	0.037
가톨릭신자비율	0.00309	0.004	0.72	0.472
R-Square	0.868			

* p<.10 ** p<.05 *** p<.01

분석 결과를 통해 일가족양립정책 중 가족서비스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남성 대비여성임금비율이 높은 것으로 즉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 결합시계열 분석 잔차 진단 통계치

검증 내용	검증통계도구	$\chi^2(p>\chi^2)$	검증 결과	처치방법
고정효과	Hausman	13.97(0.1744)	고정효과 없음	random effect
동시상관	Pesaran	-0.691(0.4897)	동시상관 없음	PCSE 모델(ar1) 적용
이분산성	Modified Wald	13021.72(0.000)	이분산성 있음	
자기회귀	Durbin-Watson D	0.5806	정적자기상관 있음	5년시차종속변수 투입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할수록 여성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듯 일가족양립정책은 젠더형평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출산휴가급여 소득 대체율이 클수록 남녀임금비율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이 클수록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Mandel & Semyonov(2005)가 밝혔듯이 가족정책 특히 출산을 보호하는 정책이 오히려 젠더간 직종분리와 고용주의 통계적 차별을 통해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자칫 위험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여성의 개별 임금에 대한 정책의 인과적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국가단위의 분석이기 때문에 남녀임금격차가 클수록 여성 임금이 워낙 낮아 출산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 단위 분석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족양립정책 외에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높을수록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현금급여지출, 실업률, 여성고용률, 가톨릭신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요약과 정책적 함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형평성 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서비스지출비율은 여성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여성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즉 일가족양립정책인 가족서비스지출, 육아휴직 등은 여성노동시장의 젠더형평성 즉 여성 고용과 남녀임금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의 보육서비스 부문 지출을 증가시킬수록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고, 남

녀임금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횡단비교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서도 일가족양립정책 특히 보육서비스 부문 지출이 여성 고용과 남녀임금비율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보육서비스 지출의 일가족양립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어 있을수록 여성 고용률과 남녀임금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가족양립정책 중 육아휴직의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여성 고용 및 남녀임금비율에 대한 정적 영향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증대될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별 임금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분석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복지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중 보육서비스지출,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 등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가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도 여성 고용의 증가, 남녀임금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 확대-보육서비스 지출 증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정책 정책방향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던져 준다. 우선, 보육서비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서비스 지출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가족서비스지출이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남녀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국가의 보육서비스 지출 확대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특히 미취학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25세~34세 근로자 가구의 보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더욱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현재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29.8%로 서비스 공급에 비해 이용률이 작다. 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수가 적다는 의미이다(홍승아, 2008). 보육서비스 지출을 확대하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공급되어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

육서비스의 질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보육시설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및 인건비 지원금을 확대하되 지원 대상 보육시설의 평가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공공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관리 확대 외에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저하게 부족한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및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보육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보육참여를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수를 확대하고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었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이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여성고용률이 증가하고 남녀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정책이 노동시장의 젠더 형평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은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정액급여로서 급여 소득대체율이 2006년 통상임금의 26.7%에 불과하다(홍승아, 2008).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2007년 현재 산전산후휴가 사용자 대비 36.3%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육아휴직의 활용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 직장복귀 어려움에 대한 우려, 동료의 업무량 증가, 직장 분위기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때(홍승아, 2008),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동료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

로 볼 때 육아휴직 활용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체인력 풀(pool)이 마련되어 육아휴직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21,185명 가운데 여성이 20,875명(98.5%), 남성이 310명(1.5%)으로 여성 근로자만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휴직일수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2008년 상반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는 232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는 187일로 나타나 여성이 더 오랜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육아휴직 활용의 젠더 편향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부성할당제 또는 스웨덴에서 최근 도입한, 부부(파트너) 중 육아휴직을 더 길게 사용하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젠더 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국가 간 시계열자료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세제혜택, 근로유연시간제 등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추후 시계열자료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결합시계열분석이 아닌 미시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합시계열 분석은 미시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 비해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의 선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의 수를 확보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상황간의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시 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 효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정(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김영미(2007). 복지국가와 여성 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의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은지(2008).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지연(2008). 한국 복지국가의 젠더적 성격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책. 〈일과 가족생활의 화해: 한국과 노르웨이의 사례〉 학술대회 자료집. 2008년 9월 18일.
- 홍승아(2008). 한국의 일가족양립현실과 정책방향. 〈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8월 25일~26일.
- 홍승아·류연규·김영미·최숙희·김현숙·송다영(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 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derson, C. J. & Singer, M. (2008). The Sensitive Left and the Impervious Right: Federico. P.(2002). Recent Developments in Quantitative Comparative Methodology: The Case of Pooled-Time Series Cross Section Analysis. DSS paper SOC 3-02. <http://fausto.econ.unibs.it/~segdss/paper/pode202.pdf>
- Andersson, G.(2002), "Fertility developments in Norway and Swe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Vol. 6(4),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Anttonen, A. & J. Sipilä.(1996). Eu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pp.87-100.
- Beck, N. & J. Katz(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pp. 634-647.

- Chevalier, A & Viitanen, T.(2002).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 9, Issue 14, November 2002, pp. 915-918
- d’Addio, A. C. & M. M.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 Edin, P.A. & M. Gustavsson(2001). “Time out of work and skill depreciation”. mimeo, Uppsala University.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Polity Press.
- Federico, P.(2002). Recent Developments in Quantitative Comparative Methodology: The Case of Pooled-Time Series Cross Section Analysis. DSS paper SOC 3-02. <http://fausto.eco.unibs.it/~segdss/paper/pode202.pdf>
- Fraser, N.(1997).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Justice Interrupt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pp.41-66.
- Gauthier, A.H.(2003).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2 (University of Calgary). On-Line. http://www.soci.ucalgary.ca/fypp/family_policy_databases.htm.
- Gelbach, J.B.(2002). “Public Schooling for Young Children and Maternal Labor Sup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Issue 1, March 2002, pp. 307-322.
- Gornick, J.C., M.K. Meyers & K.E. Ross(1997). Public Policies and the Employment of Mothers: A Cross-National Study. *LIS Working Paper* no. 140.
- Gustafsson, S. & F. Stafford(1992). “Childcare subsidies and labor supply in Swed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pp.204-230.
- Gustafsson, S. (1995). “Public policies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Swede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n *Investment in Women’s Human Capital*(ed. by T. P. Schultz).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ber, E. & J.D. Stephens(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Welfare States: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IL: Chicago UP.
- Huber, E. C. Ragin & J.D. Stephens(2004).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set*, Northwestern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http://lissy.ceps.lu/cmpmwsp.htm>)
- Jaumatt, F.(2003).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 of policy and other determinants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37. pp.51-108.
- Mandel, H. & M. Semynov(2005). "Family policies, wage structures, and gender gaps: Sources of Earnings Inequality in 20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6). pp.949-967.
- Meyers, M.K., J. Gornick & K.E. Ross(1999).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In D. Sainsbury(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Neyer, G.(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1. pp. 46-93.
- OECD(2004;2005). *Taxing Wages*. OECD.
- OECD(2002;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 OECD(2008).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 Pettit, B. & J. Hook(2002). "The structure of women's employ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LIS working paper no. 330.
- Ruhm, C.J.(199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Issue 1(Feb.). pp. 285-317.
- Sayrs, L.W.(1989). *Pooled Time Series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Yunkyu Ryu*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composed of childcare services, parental leave, tax benefit and family-friendly workplace. Female employment and those relative wage to male wage is the proxy of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Analyzed dataset is that of 16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0(pooled time series dataset). Pooled time series analysis results show that as family service expenditure increases so female employment and the coefficient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as parental leave duration increases so gender wage ratio increases and coefficient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corroborative facts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trengthen the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The increase of childcare service expenditure and effective parental leave a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policies, gender equity, female employment, gender wage ratio, pooled time series analysis

* Seoul Theological University